믿음주는 소비자금융, 안심되는 소비자금융	소비자금융 동향
	한국대부금융협회 / 기간 : 2016.11.1.~2016.11.15.

✓ CLFA 소식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 기획조사부 ≫

○ **개요** :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관련 사전 취합한 회원사 질의사항 답변 및 금융당국 의견 전달

○ **준비물** : 채권추심가이드라인, 대부업 업무관행 개선 자료 출력 후 지참 (협회 회원전용게시판 372번)

○ **일정 및 장소** : 11월 17일(목) 16:00, 동작문화복지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관련 간담회는 15:00 예정)

□ 광고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변경 … ≪ 기획조사부 ≫

○ **개요** :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광고 사전 심의 대상 확대

○ **주요 내용** : **영상광고** 외에 **주요 일간 신문**에 집행되는 대출광고도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은 후에 집행이 가능

○ **사전심의 대상 주요 일간지 범위** : 한국ABC협회가 인증하는 일평균 발행부수 20,000부 이상 **33개 전국일간지**(외국어판 제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농민신문, 한겨레, 스포츠조선, 경향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동아,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서울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전자신문, 스포츠경향,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천지일보, 이데일리, 아주경제, 이투데이, 건설경제, 디지털타임스, 아시아투데이, 데일리스포츠월드

□ 지자체 위탁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 ≪ 교육사업부 ≫

○ **개요** : 경기도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기도와 서울 소재 대부(중개)업자 대상 개정 법령 안내 및 현장점검 수감 시 유의사항 관련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경기도 및 서울 소재 대부(중개)업 대표자(개인) 또는 실무 책임자(법인)

○ **주요 교육 내용**
- 개정 대부업법 및 관련 법령, 실태조사서 작성 방법, 검사·감독시 유의사항 등

○ **경기도 위탁 교육**
-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6개 지역에서 실시
- 경기도 관내 1,750개사 중 927개사 참여(참석률 53%)

○ **서울시 위탁 교육**

회차	1차(11/14)	2차(11/15)	3차(11/16)	4차(11/22)	5차(11/23)
장소	서울시청	서울시청	동작구 구민회관	마포구청	마포구청

※ 해당일 10시 ~ 12시(2H) 실시

□ 제3회 대부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 교육사업부 ≫

○ **개요** : 민간자격시험인 "제3회 대부관리 자격시험" 실시

○ **주요 내용** : 회원사 소속 748명 자격시험 지원

○ **일정** : 11월 19일(토) 14:00~15:40

○ **장소** : 서울(관악고), 부산(세정고), 광주(한국인성연구원)

▶ 자격시험 대상자 확대(16.11.08)
금융위원회는 11월 8일 응시자격의 제한(종전 : 회원사 임직원) 폐지를 승인하여 제3회 대부관리사 자격시험부터는 일반인 응시도 가능하게 되었음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 ≪ 기획조사부 ≫

○ **개요** : 신용정보원은 지난 9월 23일 금융위원회의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 서민분과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를 위해 도입

○ **주요 내용** : 채권 양도 시 채권 변동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채권자 변동 내역을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관련 TF가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참여하여 업계 의견 건의

○ **등록 의무자** : 채권 양도인 및 양수인

○ **시행예정일** : 2017년 4월 1일

○ **경과 및 향후 일정**

- 10/19 1차 회의, 11/3 2차 회의, 11/14 3차 회의, 11/16 4차 회의 예정

□ 사회공헌활동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 ≪ 경영관리부 ≫

○ **개요** : 협회와 회원사가 공동으로 4분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간담회 개최

○ **주요 내용** : 4분기 사회공헌활동 계획 안내 및 의견 청취

※ 4분기 사회공헌활동 계획 : 대한적십자에 기부금 전달을 통해 독거노인에게 겨울이불 전달 예정

○ **일정 및 장소** : 11월 18일(금) 11:00, 협회 교육장

✓ 금융당국 소식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 … ≪ 금융감독원 ≫

○ **성격** : 행정지도

○ **적용대상** : 모든 금융회사(금융위 등록 대부금융회사 포함)

○ **시행시기** : **('16.11.7)** ※행정지도 유효기간 1년(16.11.7~17.11.7)

○ **주요내용**

-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 추심(추심위임 포함) 및 매각 금지 (채권양도통지서 상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 의무화)
-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위임을 위반일로부터 1년간 제한
- 채무자와 접촉 전 원인서류 등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및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입증자료 미확보 또는 채무확인서 제시 못할 경우 채권추심 즉시 중단)
-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신용정보법」§4 반영)
-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의무화
  *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
-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우편물 제외)으로 채무자에게 접촉(유효연결기준)하는 행위 금지

□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추진 … ≪ 금융감독원 ≫

○ **개요** : 금감원은 34개 대부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현장검사를 토대로 대부업계 내 내재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2016.8.2.)

○ **주요 내용**

- 연대보증 관련 계약 주요내용 고지 및 소득확인 철저 이행
-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관행개선(계약기간의 다변화 추진 예시:1년)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11/7) 및 대부업권의 자율 준수 동의 독려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부활 자제 권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요청에 적극 동참 독려

○ **협회 대응**

- 협회와 회원사가 대부금융업 업무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 1차 회의(10/26), 2차 회의(11/9) 실시
- 업계 의견 청취 후 금융당국 전달 예정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T/F … ≪ 금융감독원 ≫

○ **개요** :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주요 내용** : 채권매각 시 매입기관 실사, 채권 정보 완전 제공 등 2주 단위로 관련 회의 개최

○ **경과 및 향후 일정**
- 10/31 1차 회의, 11/10 2차 회의 실시(11/24 3차 회의 예정)

□ 개정 대부업법 관리감독 지침 배포 … ≪ 대부업정책협의회 ≫

○ **개요** :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는 지난 2016. 10월 개정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배포

○ **주요 내용** : 지난 2014년 12월 발간한 지침 내용을 토대로 개정 대부업법령 및 관련 유권해석 내용 반영

○ **경과 및 향후 일정**
- 관리감독 지침 내용 회원사 안내 및 협회 홈페이지 게시(11.4)
- 향후 책자 인쇄 후 회원사 배포 예정

✓ 국회 소식

□ 대부업 관련 국정감사 결과

○ **최고금리 인하 관련 국회 발의안**

- (윤관석 의원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25% 이내로 인하
- (강병원 의원안)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20% 이내)
- (협회 대응) 최고금리 인하 관련 반대 의견 금융당국 및 국회 제출

○ **최고이자율 인하 이전 대출계약에 대한 이자율 인하 요구**

- 대출 계약기간이 5년임에 따라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

○ **대부금융업 광고에 대한 부정적 기류 확대**

- '한달 무이자', 여성·청년 등 사회취약 계층 대상 광고 지적
-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더 이상 타 금융업의 여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를 악용한다는 지적
- 영업이익 대비 미미한 사회공헌비 지출 현황 및 광고비 확대 지적
  * 악의적으로 2013년/2015년 비교, 사회공헌비를 줄여 광고비를 확대한 것처럼 보도

○ **등록 대부업자의 교육세 납부의무 배제에 대한 오해 및 과세 요구**

- 유권해석 상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교육세 납부 압박, 교육세법 개정 및 유권해석 변경 압박
- **(협회 대응)** 대부금융업 현황 및 업계 의견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에 건의, 관련 해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

※ 참고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 대부업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 없음**
- **법무법인 자문 결과 첨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산유동화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허가 또는 인가 등"의 의미가 반드시 "등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 없음.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관행 성립. 새로운 해석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음**.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금지 및 채권 소각 요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채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1/8) 결과 보고

○ **개요** :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대부금융업과 관련이 깊은 채권추심법(4건) 및 이자제한법에 대하여 심의

○ **회의 결과** :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전문위원 검토의견** : 협회 회원전용게시판 373번 참조

- 제윤경 의원(더민주) 채권추심법 발의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에서 주장 전 판단 불가 - 추심금지는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반 및 재산권의 과도 제한 우려
소멸시효 완성사실 고지의무 및 위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의무	-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변호사 아닌 채권추심자의 소송행위 금지	- 소송행위 금지는 채권의 본질적인 요소 박탈 - 고의적 연체채무자 입장만 강화하여 대부업 및 여신금융업 등 채권자의 권리 위축 우려
소비자단체 등의 불법채권 추심 관련 단체소송제도 도입	- 단체소송 요건 및 단체소송 적합한 대상인지 모호 - 법률상 의무사항에 대한 단순 확인에 불과, 단체 소송의 실효성 확보 어려움

○ **박병석 의원(더민주) 채권추심법 발의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의사 표시 금지 및 양수도 금지	- 사적 자치 원칙 위반 및 재산권의 과도 제한 우려 - 민사소송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결정되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최명길 의원(더민주) 채권추심법 발의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위계·위력을 사용한 채무변제 자금 마련 강요 금지	현행 법률로 입법 취지 달성 가능

○ **이학영 의원(더민주) 채권추심법 발의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채권추심 대가 제한 (채권액의 30% 이내)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반 및 재산권 과도 제한 우려

○ 이찬열 의원(무소속) 이자제한법 발의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한이자율 연 20% 제한	- 상한을 낮게 할 경우 시행령의 실익이 없고, 경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범위 제한 - 고금리 자금수요자의 차입기회 축소 우려
기존계약 소급 적용	- 신뢰보호원칙 및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법 시행 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토록 수정 필요

□ 법안 발의 현황

법률명 (일자)	발의자 (소속)	주요 내용	비고
신용정보법 (16.11.11.)	김해영 의원 (더민주)	· 신용조회업 종사자와 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는 표현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안 §22①ii, §27①ii).	타법(민법) 개정에 따른 변경 의안 전문 추후 보고
대부업법 (16.11.14.)	변재일 의원 (더민주)	· 대부상품의 표시 · 광고와 계약체결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사실, 조기상환조건 고지 의무화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대부업 광고의 전면금지	의안 전문 추후 보고

□ 국회 회의 일정

위원회		일시	안건/회의결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11. 17. (목) 10:00	법률안 심사 및 의결(예정)
		11. 21. (월) 10:00	법률안 심사 및 의결(예정)
		11. 22. (화) 10:00	법률안 심사 및 의결(예정)
		11. 23. (수) 10:00	법률안 심사 및 의결(예정)
		11. 24. (목) 14:00	법률안 심사 및 의결(예정)
	전체회의	11. 16. (수) 10:00	법률안 심사 및 의결(예정)
		11. 24. (목) 14:00	법률안 심사 및 의결(예정)
법사위	전체회의	추후 일정 미정	채권추심법 (박병석, 제윤경, 최명길, 이학영의원안), 이자제한법(이찬열의원안) 심사 중